

검찰,朴 구속영장 청구 곧장 갈까

혐의 무거워 구속영장 청구 관측 우세... 50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이 변수... 4월 초 이전 결정할 듯

박근혜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검찰이 향후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관심이 쏠린다.

검찰은 그간 조사 내용을 토대로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또는 재소환 조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 등을 고려할 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다만, 5월9일로 예정된 대통령 선거가 검찰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로 해석되는 분위기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에게는 모두 13가지 혐의가 적용된 상태다. 삼성 등 기업으로부터 부정한 청탁 등과 함께 수백억원의 뇌물 혐의가 주를 이루고 있다.

적용된 혐의만을 봤을 때 구속영장 청구는 예정된 수순으로 보인다. 공범 관계에 있는 최순실(61)씨를 비롯해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48)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 모두 구속기소된 점도 영장 청구 가능성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이 박 전 대통령 지시를 받아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된 만큼, 상급자인 박 전 대통령 역시 구속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박 전 대통령에게 430억원대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이재웅(49)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돼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도 박 전 대통령 영장 청구 가능성을 키우는 요

소다. 뇌물공여 혐의자가 구속된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무겁게 처벌되는 뇌물수수 혐의자를 불구속기소 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박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을 경우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은 부쩍 커진다. 전직 대통령 신분인 점을 고려할 때 도주 우려가 없다고 하더라도 검찰 조사 내용을 토대로 증거인멸에 나설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변수는 불과 50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이다.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 결정을 내릴 경우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시비가 일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의 견고한 지지층을 기반으로 검찰을 향해 정파적 수사를 했다는 저항이 일 가능성도 있다.

현재 검찰은 대선 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한다는 방침을 세운 상태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 신병처리 결정은 늦어도 4월 초 이전에 나올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박 전 대통령 재소환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게 점쳐지고 있다. 두차례에 걸쳐 박 전 대통령을 소환해 조사한다면 '모욕주기' 시비가 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과 열성 지지자들로부터 극심한 공세에 시달리면서 사회적 논란이 야기될 수 있다.

결국 검찰 입장에서는 박 전 대통령을 재소환해 조사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크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검찰이 어떤 결정을



민주당 경선 투표하는 시민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경선 투표가 열린 22일 익산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경선 신청자가 투표함에 용지를 넣고 있다. /뉴스시스

문재인 "외교·자사고·국제고, 일반고 전환"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는 22일 "설립 취지에서 벗어나 입시 명문고가 돼 버린 외국어고, 자사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겠다"고 공약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공평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겠다"면서 이같은 교육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고교서열화를 완전히 해소하겠다. 일반고 전성시대를 열어갈 것"이라며 "학교공부만 열심히 해도 대학에 갈 수 있도록 대학 입시를 획기적으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외교와 자사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겠다"며 "일반고와 특목고, 자사고 고교입시를 동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학입시를 학생부교과전형, 학생부종합전형, 수능전형 3가지로 단순화시키겠다. 모든 대학에서 기회균등 전형의 의무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학서열화는 지역 국립대 육성으로 바뀌겠다"며 "장기적으로 발전가능성 높은 사립대학은 '공영형 사립대'로 전환시켜 육성하겠다"고도 약속했다.

문 전 대표는 국가 교육예산 증액, 누리과정 예산 중앙정부 전액 부담, 초중고 의무교육화 등도 공약했다. 그는 "대학등록금 획기적으로 낮추겠다"고 부연했다.

문 전 대표는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초등학교 '1:1 맞춤형 성장발달시스템'과 '기초학력보장제' 도입, 중학교 일제고사 폐지와 잘대평가 단계적 도입, 자유학기제 확대 발전, 고등학교 고교학점제 실시 등을 약속했다.

문 전 대표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국가교육회의'를 설치해 교육개혁에 대한 범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고도 공약했다. 국가교육회의는 학제개편과 국립대연합체제 개편 등을 논의하고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 초중등 교육은 시도교육청에 완전히 넘기고 학교 단위 자치기구도 제도화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시스

이재명·안희정 방문... 전북 민심은?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당내 경선에 나선 이재명 성남시장과 안희정 충남지사가 22일 전북을 방문해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

이재명 시장은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촛불혁명과 새로운 전북 천년의 청사진을 완성시키는 대통령이 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 시장은 "호남은 제 인생의 정치적 스승이고 질풍노도의 청년 이재명에게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일깨워 준 곳"이라고 말했다.

이날 전북 정책 발표를 한 이 시장은 새만금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탕평인사 등을 이끌어내겠다고며 전북 민심 얻기에 주력했다.

그는 "전북을 포함한 호남에 대한 탕평인사를 반드시 실시해 인사로 인한 소외



이재명 성남시장 안희정 충남지사

감을 없애겠다"며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넘겨 실질적인 지방자치의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노후화된 산업단지를 국가가 매수해 이를 다시 필요한 기업들에게 장기 무상임대를 하는 지역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며 "UN 기구인 국제평화기구 등 평화와 인권을 담당하는 국제기구 설치를

주도해 이를 전북에 유치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을 전면 재검토하고, 새만금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청와대에 지역협력실을 신설하고 전북담당관을 지정해 전북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안희정 충남지사도 도의회를 방문해 "어떠한 문제 제기에도 후보는 답을 할 의무가 있다"며 문재인 후보에게 날선 공방을 이어갔다.

안 지사는 "문재인 전 대표의 아들 채용 관련 문제 제기는 네거티브 전략인가라는 물음에 "검증 과정에서 국민과 언론인의 의문이 다 네거티브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대답했다.

이는 문 전 대표 아들의 특채채용 의혹에 문 전 대표 측이 허위라고 반박하는 태

도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적폐 세력과 손잡는다는 일관된 미움과 분노에 기반해 저의 건설적인 정책 대안을 정치적 야합으로 호도하는 공격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안 지사는 "타협 정신은 상대 의견의 존중이다. '야합'과 '무원칙한 정치행위'로 깎아내리는 일을 중단해야 한다"며 "그래야 국민 요구를 실천하는 일 아니겠느냐. 생산적 정책토론을 하자는 제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 분명한 제안은 정치위기를 대연정으로 풀 것이며, 안보와 외교에 대한 국가위기를 초당적 협력기구로, 사회적 대타협 만들고자 한다는 것"이라며 "의회의 가장 강력한 다수파로 차기 정부를 이끌겠다는 주장"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인재용 기자

이재명 "전북 천년의 청사진 완성시키겠다" 안희정 "정치위기를 대연정으로 풀 것"

孫·朴 "호남 지분" ... 안철수 "협치·통합 중요"

손학규 전 경기지사와 박주선 국회 부의장은 22일 호남이 독자적인 지분 갖고 참여하는 연정을 한목소리로 주장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호남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으면서 통합과 협치를 언급했다.

손 전 지사는 이날 공중파 3사와 YTN이 생중계한 국민의당 대선 경선후보자 합동토론회에서 "호남이 스스로 독자적인 지분을 갖고 정권을 만들어야 한다"며 "연립 정권에서 호남이 갖는 확실한 지분, 호남사람 등용, 호남에 투자하고, 민주주의의 호남뿐만 아니라 경제성장 중심으로서의 호남, 확고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호남이 결단해 우리 정권을 만들 능력이 있는 사람을 뽑아야 한다"고 밝혔다.

박 부의장도 "호남은 전략적 선택을 통해 호남이 참여하는 한국 통합과 협치를 반드시 이뤄내야 할 주체 중 한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안 전 대표는 호남 지지율을 높일 방안을 묻는 질문에 "저희들이 부족한 탓"이라고 답했다.

이어 "이번 당이 집권해도 여소야대"라며 "이제 대통령이 될 사람이 얼마나 협치를 잘하고 통합의 리더십을 잘 하는가로 귀결된다. 거기에 적합한 후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협치와 통합을 강조했다. /뉴스시스